

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신 동 준**

국 | 문 | 요 | 약

이 논문은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인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부패의 원인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와 세계은행 데이터, 그리고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경제지상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높았다. 소득불평등의 경우는 일관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 집단에서보다 중간 정도인 국가 집단에서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더 컸던 반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 집단에서는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통제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가족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적 통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 신뢰는 대체로 부패에 대해 부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참여도 역시 그러한 효과를 보였지만 가족주의나 정치참여를 통제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일인당 국민총생산(GDP)과 정치 참여도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강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부패와 같은 일탈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학적 시각을 넘어서 경제적·정치적 요인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 부패, 범죄학, 아노미, 사회통제, 문화, 사회구조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27-B00417). 이 논문의 초고는 2012년 『Asian Criminological Society, 4th Annual Conference』에서 “A Cross-National Study on the Social Causes of Corruption: A Criminological Approach”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음.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I.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부패를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부패는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고 있는 부패 지수인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점을 가장 깨끗한 상태로 보았을 때 4.2점에서 5.4점의 수준으로 전체 조사대상 국가들 중 50위에서 39위에 불과한 실정이다.¹⁾ 100점 척도로 바뀐 가장 최근의 2012년 CPI에서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전체 176개국 중 여전히 45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부패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자세한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패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국가를 사례로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부패의 일반적 원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특정 국가의 부패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범죄 사회학적 관점에서 국가 간 비교자료를 통해서 부패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는 거시적 경험 연구이다. 어떤 거시적 특징들이 사회의 부패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인 것이다.

전 세계 국가의 부패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CPI 점수와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의 부패 정도는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우 안정적이다. 이는 한 사회의 부패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그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근본적인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패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부패의 개념이나 유형을 검토하거나(예를 들어, 박선웅, 1998; 이상환, 2002; Deflem, 1995; Lancaster and Montinola, 2001; Qizilbash, 2001; Johnston, 2002; Alemann, 2004; Moroff, 2004), 부패의 결과, 즉 부패가 정치발전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

1)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

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예를 들어, 양동훈, 2002; 황진영 · 강동관, 2007; 장수찬, 2008; Alam, 1989; Mauro, 1995; Keefer and Knack, 1995; Bardhan, 1997; Rose-Ackerman, 1999). 물론 이러한 작업들이 부패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당연하지만, 부패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본다면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적 · 문화적 특징과 문제점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유용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부패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정치학이나 경제학,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예를 들어, 이영균, 2004; Scott, 1969a; Nas et al., 1986; Shleifer and Vishny, 1993; Philp, 2001; della Porta, 2004), 경험 자료에 근거한 중요한 분석들이 특히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하겠다(예를 들어, 장근호, 2000; Jung and Hwang, 2003; 김태은 외, 2008; Treisman, 2000; Sandholtz and Koetzle, 2000; Montinola and Jackman, 2002; Collier, 2002; Sung, 2002; 2004). 부패는 중요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회구조적 · 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하는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부패의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특히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부패를 화이트칼라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패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Johnston, 1986; Williams, 1999; Qizilbash, 2001), 일반적으로 “사적인(친밀한 가족이나 당파) 금전이나 지위상의 이득 때문에 공적인 역할에 주어진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Nye, 1967: 419)로 정의된다. 또한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직에 있는 자가 규범에 벗어나 행하는 행위”(Huntington, 1968: 59), “특수한 동기와 관련된, 즉 공익을 희생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탈 행위(Friedrich, 1972: 127)”, 혹은 “어떤 행위 기준을 위반하는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자원을 남용하는 것”(della Porta and Vannucci, 1999: 16)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정의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 부패를 도덕적으로 용인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다.²⁾ 더불어서 부패는 많은 사회에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부패는 일반적인 범죄의 정의에 부합한다.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광범위한 범죄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에도, 부패는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의 특성과 일치하기도 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 제도적 신뢰를 저해하는 등의 포괄적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안전의 위협 등과 같은 공공의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Klitgaard, 1988: 38-48).

이러한 부패의 정의와 성격에 따르면 부패를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업 활동의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Sutherland, 1949: 9)라고 정의되는 화이트칼라 범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서덜랜드는 구체적으로 형사체계의 제재를 받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죄학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거리의 범죄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큰 경제적 ·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수뢰와 같은 행위를 화이트칼라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따라서 부패를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보는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다 하겠다.³⁾

물론 부패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범죄학의 시각에서 논의한 연구는 존재한다(박철현, 1999; 연성진, 1999).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부패의 문화적 · 사회구조적 원인을 범죄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경험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 논문은

2) 일부 학자들은 부패의 도덕적 가치를 예단하는 보편적인 부패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Leys, 1965). 부패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로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Qizilbash, 2001: 268). 이러한 접근의 예로서 특정 국가에 있어서는 부패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예를 들어. Leff, 1964), 그래서 부패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일부 서구 선진국의 잣대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일탈과 범죄의 기능과 상대성에 대한 뒤르케임과 낙인이론가들의 논의를 연상하게 한다.

3) 행위의 특징이 아닌 행위자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 서덜랜드의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은 이후에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Benson and Sally, 2009: 1-17). 일부 학자들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행위의 특징으로 정의해야만 경험적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층의 행위만이 아닌 중층이나 하층의 사소한 횡령 행위 등도 개념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다. 부패 역시 일반적으로 고위직의 행위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급 공무원의 행위도 포괄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서도 부패와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상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패 수준의 국제간 비교 연구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대해 탐색한다. 부패도 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입장에서 범죄사회학 이론의 틀을 빌어 부패 수준의 국가 간 변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부패 현상은 오랜 동안 경제학과 정치학의 연구 영역이어 왔다. 사실 부패는 정치적 현상이면서 경제활동의 측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를 설명할 때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중요하게 다룬다. 먼저 이러한 요인들을 범죄학 이론의 논점에서 해석하고 부패와의 관계를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범죄학 이론의 범주 밖에 있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일부 효과도 함께 분석하면서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의 효과와 비교하고, 그 이론적 의미도 검토해 볼 것이다.

II. 부패에 대한 범죄학이론과 거시 연구 검토

1. 아노미이론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인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은 부패의 문화적·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두 이론은 모두 뒤르케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신동준, 2008). 아노미에 대한 뒤르케임의 이론은 이후에 머튼(Merton, 1938; 1957)의 아노미이론으로 이어졌다. 뒤르케임은 사회적 격변기에 사회의 부분(기관) 간의 관계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사회의 능력이 약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이처럼 규범의 효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아노미’라고 명명하였다(Durkheim, 1933; 1951). 한편 머튼은 아노미가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마치 규범과 같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 사회를 비판하며 어떤 문화적 특성과 사회구조적 특성이 아노미를 낳게 되는지, 그리고 아노미가 어떻게 일탈을 낳게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머튼은 그의 아노미 이론이 일탈행동을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려는

목적에 갖고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머튼은 일탈을 조장하는 문화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와 심한 불평등 구조를 지목한다. 특정 사회의 문화가 경제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불평등 정도가 심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일탈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이다(신동준, 2004).

머튼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장애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성공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적 특징과 결합될 때 그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종의 규범처럼 된다고 보았다. 성공에의 “도덕적 명령”은 “가능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성공하라는 문화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목표달성의 제도적 수단에 대한 순응을 약화시킨다(Merton, 1957: 169). 경제적 성공 목표를 위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어,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는 문화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규제구조가 붕괴되면 이득의 계산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유일한 규제 장치가 되는 아노미적 사회가 된다고 머튼은 주장한다(Merton, 1938: 682).

머튼의 이론은 주로 하층계급의 범죄를 설명하는 틀로 이해되어져 왔다. 불평등 구조 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가장 극심하게 겪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공목표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고, 성공목표에 대한 문화적 압력은 모든 계층에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층계급이라 할지라도 아노미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경제적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제도적 수단을 경시하는 현상을 낳을 것이다(Messner and Rosenfeld, 1997: 52-53). 이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은 사회의 전 계층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의 이론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은 중상층의 일탈행위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으며(Passas, 1995: 101-102; 1997),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의 차원에서 조직의 비위행위를 연구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Vaughan, 1997). 그러므로 머튼의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경험적 연구는 충분히 시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금권선거의 행태로 인해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되고, 치열한 시

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과 결탁하는 현상 등이 아노미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머튼의 이론으로 부패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립셋과 렌즈(Lipset and Lenz, 2000)의 국가 비교연구가 거의 유일한 시도이다. 이는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s)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패에 대한 문화적 요인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이 논문의 방향을 잡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었다. 하지만 립셋과 렌즈의 연구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상세한 결과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중요한 한계가 있었다.

머튼의 이론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일탈과 범죄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한 불평등 구조는 계층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성공 목표 달성에 구조적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상황에서 경제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 압력이 아노미를 낳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머튼의 이론은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와 심한 불평등구조가 결합하여 아노미를 낳는다고 본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의 범죄 유발 효과가 더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패와 같이 중간 이상의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탈 행위인 경우 불평등구조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다소 불확실할 수 있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현신이 더 강할 것이다.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계층의 사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안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 널리 퍼져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경제적 성공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의 영향력은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 압력 수준과 무관하게, 불평등 정도는 일탈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공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의 효과는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전자가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 후자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발견될 것임을 또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의 경우에도 불평등의 효과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심한 불평등은 권력을 쥔 상층에게는 부패의 동기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와

규칙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사회구성원의 회의와 냉소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시민적 덕성과 규범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부패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Dobel, 1978; You and Khagram, 2005). 그리고 불평등이 심할수록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가 부패를 조장하는 효과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은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적용되어온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이다(Hirschi, 1969). 그러나 사회통제이론은 뒤르케임의 지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거시 범죄학 이론인 사회해체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Shaw and McKay, 1942; Kornhauser, 1978), 뒤르케임의 전통에 기반하는 거시 차원의 설명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뒤르케임은 사회의 통합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사회의 통합이 강할수록 일반적으로 일탈행위의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Durkheim, 1951). 이러한 이론 틀을 부패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통합 정도가 강할수록 부패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통합기제를 중심으로 사회가 통합이 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영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통합의 기제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전통적인 통합기제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와 일탈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족제도를 통한 통합과 종교제도를 통한 통합이다. 둘째는 이러한 전통적 통합기제와 구분되는 근대적 통합기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시민적 제도”를 통한 통합이다(신동준, 2006: 56-58). 여기서 시민적 제도를 통한 통합이란 최근 사회해체이론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비행 제어 기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공식적 연결망”이 확대된 개념에 가깝다고 하겠다(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2).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 내지는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통합과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와 같은 기제를 통해 일탈행위가 통제된다면 이를

시민적 제도를 통한 통합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라는 특정 유형의 일탈행동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차원의 통제기제들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통한 통합과 유대는 일탈행동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 사회통합에 주목하는 이론의 입장이다(Durkheim, 1951; Hirschi, 1969). 하지만 부패의 경우에는 가족제도를 통한 통합이 오히려 일탈을 조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족주의는 우리나라 부패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온 문화적 특징이다(전수일, 1996; 박선웅, 1998; 박철현, 1999; 연성진, 1999). 일찍이 반필드(Banfield, 1958)는 남부 이탈리아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는 개념으로 부패의 원인을 설명한 바 있다. 비도덕적 가족주의란 가족의 물질적·단기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공동체적 가치는 결핍된 상태에서 가족의 유대와 안녕만을 강조하는 일종의 문화적 특징인 것이다.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만연하는 공동체에서는 가족집단을 넘어서는 관계와 연대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필드는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 부패는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다고 주장하였다.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 1970)도 네 가지 유형의 정치 의무 관계를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친족)주의 기반 체계는 부패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헌팅턴(Huntington, 1968) 또한 개인, 가족, 씨족의 이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정당 정치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할 때 부패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보았다. 스콧(Scott, 1969a)도 과거 미국 도시의 조직정치(machine politics)와 관련해서 유사한 지적을 하였다. 가족과 민족 집단의 강력한 유대가 공식 정치체계의 약한 정당성과 결합될 때 조직정치를 통해서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력한 가족주의 문화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보편적인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경계를 넘어서는 관계와 연결망의 형성이 어려워 일반적인 타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자발적 단체 참여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부패가 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족, 친지, 친구 등의 사적 연결망 내에서만 신뢰가 형성되어있을 경우 부패의 동기는 커지게 된다(Rose-Ackerman, 1999: 97-99).

반면 사회적 신뢰나 자발적 결속과 같은 시민적 규범과 덕목이 강한 사회에서는 부패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Heidenheimer, 1970; Dobel, 1978). 하이덴하이머는 “시민 문화 기반 체계”에서 금전적 동기가 아닌 도덕적 만족을 추구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활성화 되고 강력한 공동체 규범이 발전하기 때문에 부패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았다(Heidenheimer, 1970: 147). 강한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민주주의 제도는 부패 예방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Johnston, 1998). 따라서 시민적 제도를 통한 통합은 가족제도를 통한 통합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 사회의 부패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제도를 통한 통합은 부패를 강화시키는 반면, 시민적 통합은 부패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통합기제의 효과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종교제도를 통한 한 사회의 통합 정도가 부패 정도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 볼 것이다. 부패에 대한 종교적 통합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종교집단의 통합과 유대는 자발적 단체 참여의 측면과 함께 전통적 통합기제의 특성도 보이기 때문에 다소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부패의 거시적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통상적으로 기존 부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변인들은 주로 정치적 요인 내지는 경제적 요인들이었다. 예를 들어, 장근호(2000)의 연구에서는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과 일인당 GDP 등 경제적 변인들과 정부 위기 등 정치적 변인들이 부정부패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은 외(2008)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적 안정성과 같은 정치적 변인, 신용시장 규제, 사업 규제, 무역자유도와 같은 경제적 변인, 그리고 정부규모와 같은 행정학적 변인들이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들로 분석 모형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부패의 원인 분석에 전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몬티놀라와 잭크만(Montinola and Jackman, 2002)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정도, 공공영역 규모, 일인당 GDP를 설명변인으로 제시하였고, 샌드홀츠

와 캐츨(Sandholtz and Koetzle, 2000)의 연구에서도 일인당 GDP와 민주주의 정도와 함께 경제적 자유도와 무역규모와 같은 경제적 변인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유종성과 카그람(You and Khagram, 2005)의 연구는 그 외에도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천연자원 수출비율, 연방제 정도 등이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물론 출산율(장근호, 2000)이나 민족적 분리(Treisman, 2000; You and Khagram, 2005)와 같은 사회적 변인들이나, 영국 식민지 경험과 신교도 비율(Sandholtz and Koetzle, 2000; Treisman, 2000; You and Khagram, 2005) 등과 같이 문화적 차원에 관련된 변인들이 분석에 포함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러한 변인들이 모형에서 갖는 이론적 함의가 제시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한 예는 더욱 더 드물다 하겠다. 예를 들어, 가족주의를 부패의 문화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립셋과 렌즈(Lipset and Lenz, 2000)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근거해서 성취동기를 강조하는 문화를 보이는 국가가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제도적 수단의 접근 가능성은 정부가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도와 일인당 소득으로 측정하였고, 이 변인들이 부패수준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또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머튼의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조’라는 문화적 측면의 효과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머튼의 이론에서 또 다른 핵심이 되는 불평등구조라는 사회구조적 측면의 효과 역시 이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유종성과 카크람(You and Khagram, 2005)의 국가 간 비교연구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부패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패수준은 다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순환적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부패와 불평등은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정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권리 점수로 측정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부패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셋과 렌즈(Lipset and Lenz, 2000)는 가족주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나라들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족통합이 강한 나라일수록 더 부패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반필드(Banfield, 1958)의 이

론에 근거하여 가족 집단을 통한 강한 유대를 보이지만 다른 사회 집단과의 결속은 희박한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연고주의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권력거리, 집단주의, 남성주의, 불확실성 회피 등의 연고주의 문화 특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조은경 · 이정주, 2006).

트레이스만(Treisman, 2000)은 종교를 천주교와 같은 “위계적 종교”와 개신교와 같은 “개인주의적 종교”로 구분하고 위계적 유형의 종교는 부패를 조장하는 반면 개인주의적 유형의 종교는 부패를 억제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종교의 종류가 아니라 종교의 통합 정도에 이론적인 관심이 있다. 뒤르케임(1951)이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사회통합적이라고 보고 자살이라는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과 동일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뒤르케임이 잘 보여주었듯이, 위계적 종교와 개인주의적 종교 사이의 사회학적 핵심 차이는 사회통합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종교는 전통적인 통합 기제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로 올수록 그 영향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발견된다(Durkheim, 1933).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통합기제는 일반적으로 일탈과 범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패라는 유형의 일탈 내지는 범죄 행위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좀 더 근대적인 형태의 통합기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적 통합의 경우는 부패를 포함한 일탈과 범죄를 보편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부패를 포함한 범죄와 일탈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부패의 근본적인 예방요인으로 지목되는 시민적 덕성, 혹은 시민적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Dobel, 1978).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는 사회적 신뢰와 시민단체 참여 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가족과 같은 사적인 일차집단을 넘어선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시민적 통합의 근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비도덕적 가족주의’와 대치되는 문화적 경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 정도가 높은 사회에서 부패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많을수록 관료와 정치가들의 행태를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커질 것이며, NGO의 국제적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부패 감시활동이 가능해지고 있다(전영평, 2003; 윤상철, 2000; 김두식, 2004).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 참여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정치 참여도 역시 시민단체 참여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치 참여도는 투표율과 같은 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도 있지만, 부패 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원서에 서명하고 보이콧과 시위에 참여하는 정도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시민과 언론의 감시로 부패행위가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Treisman, 2000: 404),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 활동은 부패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부패를 예방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경제적 · 정치적 경쟁을 제도화할 것이며, 이는 부패 수준과 부패로 인한 악영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Shleifer and Vishny, 1993). 하지만 민주주의와 부패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리 명확하지 않다(윤상철, 2000).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형식이자 근본 요소이지만, 계급투표나 이념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가 너무 자주 있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치러지는 사회에서는 부패의 동기가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부패가 만연할 수 있다(Scott, 1969b; Rose-Ackerman, 1999: 127-142).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표면적 제도 자체보다는 민주주의적 규범과 가치가 부패 예방에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 있다(Sandholtz and Koetzle, 2000).

정치 참여도가 부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치적 요인에 대한 것이라면, 경제발전 정도는 핵심적인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많은 학자들이 부패를 경제적 저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해왔다(Alam, 1989; Mauro, 1995). 하지만 경제발전 정도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려가 되고 있다(Bardhan, 1997). 경제발전 수준과 부패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패가 가난을 낳고 다시 가난이 부패를 낳는 “부패의 함정(corruption trap)”에 빠지게 된

다는 진단도 있다(Rose-Ackerman, 1999: 3). 따라서 부패의 원인이든 부패의 결과이든, 경제발전 수준은 부패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범죄사회학적 이론들과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부패를 설명할 수 있는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특히 문화적 요인들의 적절한 측정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패의 원인들을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근거하여 경제지상주의라는 문화적 특성을 주요한 변인으로 상정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소득불평등 정도의 효과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머튼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지상주의가 일탈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차원의 사회통합 기제의 효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제도, 종교제도, 그리고 시민적 제도를 통한 통합 정도를 문화적 차원에서 측정한 변인들을 조작화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정치참여 정도와 일인당 국민총생산 수준은 각각 부패의 설명에 핵심적인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서, 이 논문의 분석모형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설정된다. 이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정치적 요인과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이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자료와 변인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부패의 정도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괴팅겐 대학(Gottingen University)과 협력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사용할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독립변인 출처 데이터의 시기를 고려하여 2008년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각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점수가 제공된다.⁴⁾ CPI는 공신력 있는 10여개의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서로 다른 조사 자료들을 정교한 방법론으로 종합하여 지수화한 자료이다.⁵⁾ 이 자료들은 다국적 기업이나 기타 조직에 일하는 사람들의 정부 부패 수준에 대한 인지도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부패 지수의 내적 일관성과 타당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이상환, 2004: 151-154), 이 지수는 부패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이다(예를 들어, 장근호, 2000; 김태은 외, 2008; 장수찬, 2008; Treisman, 2000; Sandholtz and Koetzle, 2000; Lipset and Lenz, 2000; Sung, 2002; 2004; You and Khagram, 2005).

CPI는 가장 부패한 경우를 0점으로, 가장 청렴한 경우를 10점으로 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함을 나타낸다. 참고로 2008년 CPI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9.3점을 받은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이었으며, 9.2점을 받은 싱가포르, 9.0점을 받은 핀란드와 스위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5.6점으로 180개국 중 40위였다.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CPI가 실제로는 이처럼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직관적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에서 각 국가의 CPI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부패정도 변인을 변환하였다. 이렇게 변환시켰을 때, 변인의 값이 클수록 부패정도가 심함을 나타내게 된다.

부패연구에서 문화가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바이나, 문화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김태은 외, 2008: 301). 문화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 태도 등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해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s) 데이터는 문화의 영향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는 전 세계 국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폭넓게 수집한 자료로, 각 시기별 국가의 표본수

4)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

5) CPI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ambsdorff(2008)을 참고할 것.

는 3,051에서 954에 이르며 대개 1,000에서 2,000 정도의 표본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경험 분석에서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으며(Inglehart, 1990; 1997; Inglehart and Baker, 2000), 본격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부패에 대한 연구에서도 활용된 사례가 있다(장수찬, 2008; Lipset and Lenz, 2000, You and Khagram, 2005). 이 데이터도 World Values Survey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으며, 연구 목적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⁶⁾ 이 데이터는 개인 수준에서 수집된 자료이지만, 국가와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항목별로 적절히 통합(aggregate)하면 특정 국가-시기 단위의 거시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다.

세계가치관조사는 현재까지 5차례(1981-1984, 1989-1993, 1994-1999, 1999-2004, 2005-2007)에 걸쳐 18~57개 국가에서 수행되었고, 이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5차 자료(2005-2007)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의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CPI는 200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CPI도 1993년부터 발표되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CPI 점수의 시기에 따른 변이는 표본과 방법론의 변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PI 점수를 시기에 따라 비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Lambsdorff, 2008: 3). 또한 국가별 CPI 점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이 별로 없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은 세계가치관조사 5차 자료로부터 조작화되었다. 우선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근거하여 주요 변인으로 상정된 “경제지상주의”라는 문화적 개념을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성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econogrow*). 두 번째 항목은 향후 10년간 나라의 우선 목표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econogro*).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라의 우선 목표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prices*). 이 세 항목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주요한 목표를 경제적 차원에 두는 정도를 측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된다고 본다.

6) World Values Survey. <http://www.worldvaluessurvey.org/>

다음으로 가족제도를 통한 통합 정도를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측정하였고, 그 구성 항목도 세 가지이다. 첫 번째 항목은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다”라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다(*oldinst*). 두 번째 항목은 이혼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를 10점으로 하고 “언제나 용납된다”를 1점으로 했을 때 응답의 평균점수이다(*divorce*).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은 “누군가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동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다(*bothpare*). 이 항목들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측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제도라는 전통적 통합기제에 대한 문화적 지표로 적절하다고 본다.

종교적 통합을 측정하는 변인 역시 세계가치관조사의 항목을 사용하여 문화적 차원에서 조작화하였다. 여기서는 네 개의 항목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종교가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4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이 응답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relim*). 두 번째 항목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자질로 종교적 믿음이 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다(*relfaith*). 세 번째 항목은 “최근 종교행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는지”에 대해 8점 척도로 묻은 것으로 이 응답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relat*). 네 번째 항목은 “삶에서 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0점 척도로 묻은 것으로 역시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godim*). 이 항목들은 종교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역시 전통적 통합기제인 종교제도에 대한 적절한 문화적 지표로 본다.

〈표 1〉 확인요인분석에 사용된 항목들의 기술통계표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경제지상주의				
econgrow (%)	55	20.3~77.0	40.07	11.479
econgro (%)	54	20.7~82.4	59.30	13.370
prices (%)	55	1.7~71.3	25.74	12.317
가족주의				
oldinst (%)	49	67.0~96.2	82.82	7.270
divorce (평균)	55	2.61~9.35	6.03	1.569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bothpare (%)	50	47,0~99,3	85,51	11,84
종교적통합				
relim (평균)	55	1,81~3,95	3,01	,680
relfaith (%)	56	1,2~90,6	37,25	25,674
relat (평균)	54	2,29~7,63	4,52	1,419
godim (평균)	56	3,58~9,91	7,54	1,970

이상의 세 가지 변인은 다수의 항목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인(latent variable)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LISREL 프로그램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시행하여 그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세 가지 변인을 구성하는 총 10개의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부록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카이스퀘어 값은 자유도 32에 41.35로 검증 결과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지표들도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Schreiber et al., 2006: 330). RMSEA는 .06 ~ .08 미만이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모형의 경우는 .081로 모형적합도 면에서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NNFI(TLI), IFI, CFI 모두 .95 이상일 때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이 모형에서 각각 0.92, 0.94, 0.94로 기준치에 가깝기 때문에 모형적합도 면에서 역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측정모형에 따라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 통합, 이 세 변인의 요인점수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변인화 하였고, 이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2〉 확인요인분석 결과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통합	
	Δx	완전표준화	Δx	완전표준화	Δx	완전표준화
econgrow	8.48 (2.19)	0.71				
econgro	6.37 (2.32)	0.48				
prices	5.38 (1.93)	0.49				
oldinst			3.94 (1.03)	0.53		
divorce			1.79 (0.20)	1.13		
bothpare			6.92 (1.71)	0.57		
relim					0.66 (0.07)	1.00
relfaith					22.07 (2.73)	0.92
relat					1.21 (0.17)	0.86
godlim					1.79 (0.21)	0.94
모형적합도	카이스퀘어(χ^2)=41.35; 자유도=32 ($p=0.12$) RMSEA=0.081; NNFI(TLI)=0.92; IFI=0.94; CFI=0.94					

주: 모든 통계치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안은 표준오차. “완전표준화”는 Δx 의 “completely standardized solution”.

시민적 통합 정도는 두 가지 차원의 변인을 구성하였다. 먼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에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묻는 항목을 사용하여 “사회적 신뢰” 변인으로 조작화하였다.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한지 아니면 대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또 하나의 변인은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 참여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자발적 결사체에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묻는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상의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시민단체 참여” 변수로 조작화하였다.⁷⁾ 이 변인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활

7) 이 항목들은 자발적 결사체 유형을 종교단체, 스포츠/레크레이션 단체, 환경단체, 직업단체, 봉사단체 등으로 구분해서 가입 여부를 묻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묻는 항목도 있지만, 이 두 유형의 단체는 국가에 따라 자발적 결사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 두 유형의 단체 가입 여부를 포함한 변인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분석 결과에 큰 차이는

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서 각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 자료는 세계은행 웹사이트의 월드 데이터뱅크(*World dataBank*)로부터 얻었다.⁸⁾ 지니계수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일인당 국내 “총생산”과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치참여” 정도를 사용하였다.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경제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며, 자료 출처는 역시 세계은행의 월드 데이터뱅크이다. 단위는 2000년 미국 달러이다. 총생산 변인의 경우 정규 Q-Q 분포(Q-Q plot) 확인 결과 정규분포에서 심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에서 취하는 조치를 따라 자연 로그로 변환한 변인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You and Khagram, 2005). “정치참여” 정도는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보이콧에 참여하거나, 합법적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정도로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없었다.

8) <http://databank.worldbank.org/>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표 3〉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기초통계

	N	범위	평균	표준편차
부패정도(10-CPI)	56	.70~8.70	4.99	2.282
불평등정도(지니계수)	54	24.85~67.40	38.44	9.363
경제지상주의	53	-2.41~2.46	0	1
가족주의	48	-2.53~1.61	0	1
종교적통합	53	-1.55~1.74	0	1
사회적신뢰	56	3.8~74.2	26.87	16.626
시민단체참여	53	9.0~97.4	58.33	25.594
총생산(일인당GDP)	55	192.48~41399.71	11133.16	12766.894
정치참여	53	2.31~46.12	18.72	12.260

먼저 변인들의 기초통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부패정도는 10에서 CPI 점수를 뺀 값을 사용하여, 값이 클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의미하는 변인으로 변환하였다.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 통합, 이상 세 변인은 요인점수로 변인화했기 때문에, 요인점수 계산 과정의 표준화 절차에 따라 모두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다. 사회적 신뢰, 시민단체 참여, 정치 참여 변인은 모두 %가 단위이다. 2008년 CPI에는 총 180개 국가가 있고, 5차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는 총 5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자료를 조합한 결과 최대 표본크기는 56이었다.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변인별로 결측이 있기 때문에 최대 사례수가 51로 감소하였다.

〈표 4〉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패	불평등	경제	가족	종교	신뢰	시민 단체	총생산	정치참여
부패	1								
불평등	.292*	1							
경제	.570***	.064	1						
가족	.680***	.153	.466***	1					
종교	.639***	.401**	.462***	.529***	1				
신뢰	-.550***	-.513***	-.468***	-.394**	-.590***	1			
시민단체	-.297*	.185	-.340*	-.335*	.003	.241 +	1		
총생산(In)	-.827***	-.245 +	-.532***	-.643***	-.645***	.446***	.097	1	
정치참여	-.735***	-.319*	-.545***	-.702***	-.546***	.545***	.472***	.660***	1

+ p<.1, * p<.05, ** p<.01, *** p<.001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우선 종속변인인 부패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불평등,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 통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반면 사회적 신뢰, 시민단체 참여, 총생산, 정치참여는 모두 부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이론적으로 예측이 되는 결과이다.

그 이외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들을 보면, 우선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 통합은 서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세 변인은 사회적 신뢰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불평등 수준과도 동일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경제지상주의가 강할수록, 전통적 통합기제인 가족 및 종교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회적 신뢰 정도는 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적 신뢰와 시민단체 참여 사이의 상관관계는 정적(+) 관계에 있지만, 통계적 유의미 수준이 .1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신뢰 정도와 시민단체 참여 정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도는 경제지상주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지상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시민단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 참여 정도는 또한 가족주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종교적 통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시민단체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종교적 통합 정도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인당 국민총생산과 불평등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미도는 .1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 통합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저발전인 사회에서는 경제지상주의 및 가족주의 경향과 종교적 통합 수준이 높다는 증거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신뢰 정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참여도와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정치적 참여 정도는 불평등, 경제지상주의, 가족주의, 종교적 통합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반면, 사회적 신뢰, 시민단체 참여, 국민 총생산과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불평등 정도가 심하고, 경제지상주의와 가족주의 경향이 강하며, 종교적 통합 정도가 강한 사회에서 정치적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적 신뢰 정도와 시민단체 참여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정치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회귀분석 결과

부패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OLS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부패지수는 그 분포의 정규성에서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일인당 국민 총생산 변인의 경우는 분포의 비정규성이 지나치게 심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변인 별로 결측이 있었기 때문에 모형에 따라 분석 대상 사례수가 51개에서 42개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사례수가 적은 경우 회귀모형에 변인이 많이 포함되면 자유도가 지나치게 작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변인 1개 당 사례수 10개의 기준으로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변인이

4개를 넘지 않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사례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의 기준을 $p < .1$ 으로 낮추어 함께 보고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였다.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극단치(outlier)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모형에서 쿡의 거리(Cook's Distance) 수치로 지나치게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는 극단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수치가 기준보다 가장 크게 나온 사례를 영향력 있는 극단치로 보고, 이 사례를 제외한 후의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분산팽창요인(VIF)이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 경제지상주의와 소득불평등의 효과

먼저 부패 현상에 대한 머튼의 아노미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경제지상주의와 소득불평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지상주의와 소득불평등 변인만이 포함된 모형 1에 따르면, 두 변인 모두 부패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지상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또한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결과로 이론적 예측에 부합한다. R^2 값도 .4로 높은 편이다.

극단치 확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쿡의 거리(Cook's Distance) 값을 보여 해당 사례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가 모형 1-1이며, 회귀계수의 크기가 모두 다소 커지는 변화가 있지만, 두 변인 모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후에 모든 분석 모형에서도 극단치로 지목되었다.

모형 2에서 국내총생산, 그리고 모형 3에서 정치참여를 통제하였을 때 경제지상주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소득불평등의 효과는 사라졌다. 극단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모형 2-1과 모형 3-1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불평등의 효과는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과 정치참여를 함께 통제한 모형 4에서 소득불평등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정도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효과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경제지상주의의 경우에도 모형 4에서는 효과가 사라졌다. 하지만 극단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분석에서 제외했을 때 .1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패정도에 경제지상주의와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1-1		모형 2		모형 2-1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상수	2,112 + (1,068)	-	.799 (1,094)	-	11,728*** (1,608)	-	10,310*** (1,776)	-
경제지상주의	1,247*** (,246)	.556	1,394*** (,235)	.606	.481* (,209)	.215	.614** (,219)	.267
소득불평등	.076** (,027)	.305	.113*** (,028)	.405	.033 (,021)	.135	.055* (,024)	.196
국내총생산					-.957*** (,141)	-.662	-.878*** (,145)	-.608
수정된 R ²	.400		.490		.691		.710	
N	51		50		51		50	
	모형 3		모형 3-1		모형 4		모형 4-1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상수	5,551*** (1,104)	-	4,381*** (1,216)	-	11,372*** (1,480)		10,338*** (1,648)	-
경제지상주의	.583* (,241)	.262	.744** (,247)	.326	.275 (,205)	.124	.388 + (,219)	.170
소득불평등	.035 (,023)	.145	.062* (,026)	.227	.021 (,019)	.084	.037 (,023)	.135
국내총생산					-.729*** (,147)	-.512	-.684*** (,150)	-.480
정치참여	-.103*** (,021)	-.570	-.092*** (,021)	-.508	-.059** (,019)	-.323	-.055** (,019)	-.302
수정된 R ²	.608		.640		.742		.752	
N	49		48		49		4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안은 표준오차

머튼의 이론에 따르자면 경제지상주의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할수록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6>은 소득불평등 정도에 따라 분석대상 국가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별로 경제지상주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 집단과 중간인 국가 집단에서 경제지상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R^2 도 .656과 .554로 경제지상주의 변인의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지상주의의 회귀계수 차이인데, 소득불평등이 낮은 국가에서보다 소득불평등이 중간 수준으로 좀 더 높은 국가에서 확실히 경제지상주의의 회귀계수 값이 더 크다. 즉 소득불평등이 심할수록 경제지상주의의 부패에 대한 효과는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는 정작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R^2 도 .006으로 매우 낮아서 이들 국가 간에 나타나는 부패 수준의 변이를 경제지상주의가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불평등이 아주 낮은 사회에서는 경제지상주의가 부패를 낳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에서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머튼의 이론이 적용되는 불평등 수준의 어떤 임계점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불평등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면 오히려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낮을 것이고, 이 경우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신동준, 2004: 56-57). 또한 경제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 연명이 사회구성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신동준, 2011: 203-204). 이 두 설명을 종합해 보면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의 아노미적 효과는 지나치게 심한 불평등 상황에서는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불평등이 개선되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커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면 경제지상주의의 영향력은 점차로 사라질 것임을 또한 추측해볼 수 있겠다.

〈표 6〉 부패정도에 경제지상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소득불평등 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

	소득불평등: 낮음		소득불평등: 중간		소득불평등: 높음	
	<i>b</i>	β	<i>b</i>	β	<i>b</i>	β
상수	3,907*** (.376)	-	5,167*** (.394)	-	6,039 (.352)	-
경제지상주의	1,443*** (.270)	.810	2,294*** (.525)	.738	-.137 (.488)	-.075
R ²	.656		.544		.006	
N	17		18		16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안은 표준오차

나. 전통적 통합 기제의 효과

다음으로 전통적 통합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종교의 문화적 영향을 살펴본다. <표 7>의 모형 5에 따르면 종교적 통합은 부패 정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반면, 가족주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결과이다. 표준화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모형 5에 포함된 변수들 중 가족주의가 부패 정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극단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에도 가족주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며, 회귀계수의 크기 변화도 거의 없다(모형 5-1). 종교적 통합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종교적 통합이 부패 수준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지상주의, 소득불평등, 가족주의를 통제했을 때, 그러한 관계가 사라진 것이다. 종교적 통합은 이 세 변수와도 모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가족주의와의 상관관계에 특히 주목할 수 있다. 트레이스만(Treisman, 2000)은 위계적 종교의 부패 유발 효과는 이러한 유형의 종교가 가족주의와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종교적 통합은 그 자체로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보다, 가족주의를 통해서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제지상주의의 효과는 모형 5와 모형 5-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소득불평등의 경우는 모형 5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극단치로 파악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드러난다.

〈표 7〉 부패정도에 전통적 사회통합 기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5		모형 5-1	
	<i>b</i>	β	<i>b</i>	β
상수	3,596** (1,063)	-	2,423* (1,172)	-
경제지상주의	.551* (.268)	.243	.734* (.272)	.314
소득불평등	.037 (.028)	.159	.071* (.031)	.263
가족주의	1,046*** (.279)	.481	1,021*** (.269)	.469
종교적통합	.355 (.339)	.153	.194 (.336)	.083
R ²	.579		.621	
N	43		4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안은 표준오차

다음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종교적 통합 변인을 모형에서 제외하고 통제변수를 단계적으로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을 계속 진행해 보았다. <표 8>을 보면 가족주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된다. 즉 일인당 GDP와 정치참여도라는 경제적·정치적 요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극단치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가족주의가 부패 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일관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경제지상주의의 경우 모형 6에서 일인당 GDP를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사라졌으나, 모형 6-1에서 극단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했을 때에 .1 수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준다. 모형 7에서 정치적 참여를 통제했을 때에도 .1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면 .05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불평등의 경우는 통제변인이 모형이 포함되면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적 요인인 일인당 GDP와 정치적 요인인 정치 참여 정도는 여기에서도 역시 부패 정도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보여준다. 모든 모형에서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있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도 다른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다.

〈표 8〉 부패정도에 가족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6		모형 6-1		모형 7		모형 7-1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상수	9,954*** (1,711)	-	8,790* (1,862)	-	5,123*** (1,480)	-	4,119** (1,257)	-
경제지상주의	.324 (.221)	.142	.445 + (.233)	.190	.466 + (.253)	.207	.613* (.260)	.263
소득불평등	.029 (.020)	.124	.047* (.023)	.176	.031 (.023)	.133	.055* (.026)	.208
가족주의	.587* (.238)	.272	.581* (.234)	.269	.654* (.298)	.301	.640* (.290)	.294
국내총생산	-.727*** (.163)	-.524	-.663*** (.167)	-.478				
정치참여					-.069* (.026)	-.389	-.061** (.026)	-.340
수정된 R ²	.708		.723		.620		.649	
N	45		44		43		4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안은 표준오차

다. 근대적 통합 기제의 효과

앞서 분석에서 전통적 통합 기제 중 가족은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는 부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근대적 통합 기제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신뢰와 시민단체 참여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먼저 <표 9>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부패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일련의 모형과 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경제지상주의, 소득불평등, 사회적 신뢰만을 포함한 모형 8을 보면 사회적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주의를 통제한 모형 9와 국내총생산을 통제한 모형 10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정치참여를 통제한 모형 11에서도 같은 효과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미도가 .1로 떨어졌다. 하지만 극단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하고 분석한 모형에서는 모두 사회적 신뢰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상주의는 모형 8과 8-1, 모형 1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모형 9-1, 모형 10-1, 모형 11에서는 .1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모형 9와 1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소득불평등의 경우는 모형 8-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 반면 가족주의는 여전히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일인당 국민총생산과 정치참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면 다른 변인들과 비교했을 때 부패 정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9〉 부패정도에 사회적 신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8		모형 8-1		모형 9		모형 9-1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상수	4.841** (1,556)	-	2,791 (1,774)	-	5,245*** (1,341)	-	3,895* (1,581)	-
경제지상주의	.915** (.275)	.408	1.154*** (.287)	.502	.390 (.272)	.172	.585 + (.295)	.249
소득불평등	.036 (.031)	.143	.080* (.037)	.287	.020 (.027)	.086	.049 (.032)	.185
사회적 신뢰	-.045* (.019)	-.333	-.028 (.020)	-.210	-.036* (.017)	-.280	-.025 (.018)	-.195
가족주의					1.072*** (.236)	.496	1.027*** (.234)	.475
수정된 R ²	.450		.500		.607		.628	
N	51		50		45		44	

(표 계속)

	모형 10		모형 10-1		모형 11		모형 11-1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상수	12.985*** (1.679)	-	11.758*** (1.999)	-	7.120*** (1.387)	-	5.728** (1.664)	-
경제지상주의	.308 (.220)	.137	.435 + (.247)	.189	.436 + (.249)	.196	.607* (.272)	.266
소득불평등	.010 (.023)	.040	.029 (.029)	.105	.010 (.027)	.042	.039 (.033)	.142
사회적 신뢰	-.028* (.014)	-.213	-.023 (.015)	-.168	-.031 + (.017)	-.230	-.022 (.018)	-.159
국내총생산	-.908*** (.138)	-.629	-.864*** (.143)	-.599				
정치참여					-.092*** (.021)	-.509	-.087*** (.021)	-.479
수정된 R ²	.710		.717		.626		.643	
N	51		50		49		4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안은 표준오차

다음으로 시민단체 참여 정도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표 10>의 모형 12에 따르면 시민단체 참여도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극단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했을 때에는 그 효과마저 사라진다. 국민총생산을 통제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만, 가족주의를 통제했을 때와 정치참여를 통제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사라진다. 이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경제적 발전 수준이 일정하다고 할 때에는 시민단체 참여가 활발할수록 부패 정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족주의와 정치참여를 통제했을 때 그 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에, 한 사회의 가족주의 정도와 정치 참여 정도와의 관계 하에서 시민단체 참여의 효과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 참여는 가족주의 경향을 완화하고 정치참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부패를 낮추게 되는, 즉 가족주의와 정치참여가 시민단체참여를 매개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 경제지상주의는 모형 14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불평등은 모형 15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경제지상주의와 소득불평등은 뚜렷하게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가족주의, 국민총생산, 정치참여는 여기에서도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며 표준화 회귀계수도 다른 변수들에 비해 훨씬 크다.

〈표 10〉 부패정도에 시민단체참여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2		모형 12-1		모형 13		모형 13-1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상수	2,866* (1,142)	-	1,418 (1,220)	-	3,389** (1,014)	-	2,316* (1,104)	-
경제지상주의	1,090*** (,261)	.489	1,258*** (,256)	.550	.644* (,261)	.285	.797** (,262)	.342
소득불평등	.083** (,029)	.325	.117*** (,030)	.402	.049+ (,026)	.201	.076* (,028)	.272
시민단체참여도	-.018+ (,010)	-.206	-.014 (,010)	-.154	-.004 (,010)	-.045	-.002 (,009)	-.022
가족주의					1,125*** (,257)	.525	1,050*** (,250)	.489
수정된 R ²	.419		.491		.560		.604	
N	50		49		44		43	
	모형 14		모형 14-1		모형 15		모형 15-1	
	<i>b</i>	β	<i>b</i>	β	<i>b</i>	β	<i>b</i>	β
상수	12,576*** (1,550)	-	11,480*** (1,778)	-	5,569*** (1,135)	-	4,331** (1,257)	-
경제지상주의	.302 (,210)	.135	.409+ (,226)	.179	.567* (,250)	.270	.759** (,254)	.335
소득불평등	.043* (,021)	.167	.058* (,024)	.198	.030 (,027)	.120	.058+ (,029)	.203
시민단체참여도	-.019** (,007)	-.224	-.018* (,007)	-.201	.004 (,010)	.050	.006 (,010)	.063
국내총생산	-.965*** (,133)	-.671	-.909*** (,140)	-.632				
정치참여					-.108*** (,024)	-.592	-.099*** (,024)	-.539
수정된 R ²	.727		.735		.593		.628	
N	50		49		48		4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안은 표준오차

V. 맺음말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부패의 사회적 요인을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기대어 경제지상주의의 효과와 소득불평등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지상주의는 모형에 따라 일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로 경제지상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의 경우는 모형에 따라 부패 정도와 정적(+) 관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불평등 수준에 따라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차별적이라는 흥미로운 결과도 발견하였다. 소득불평등 수준에 따라 사례 국가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경제지상주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낮은 국가 집단에서보다 소득불평등이 중간 정도인 국가 집단에서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 집단에서는 부패에 대한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없었다.

사회통제이론의 입장에서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전통적 통합기제와 근대적 통합기제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전통적 통합기제와 관련된 가족주의는 매우 일관된 효과를 보여주었다. 가족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적 통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근대적 통합기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시민단체 참여 정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민적 통합의 효과는 다소 복합적인 결과를 보인다. 사회적 신뢰는 대체로 부패에 대해 부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극단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했을 때에는 효과가 사라졌다. 시민단체 참여도도 부패에 부정(-) 효과를 보였지만, 가족주의를 통제했을 때와 정치참여를 통제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사라진다. 이는 시민단체 참여가 가족주의 경향을 완화하고 정치참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부패를 낮추게 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일인당 국민총생산(GDP)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강

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발전 정도가 부패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기존의 부패 연구들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주목해왔다(황진영 · 강동관, 2007). 부패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가별로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현상이 여기서의 횡단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적 참여 역시 부패에 대해 일관되게 강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가장 일관된 효과를 보인 요인은 가족주의, 국민총생산, 그리고 정치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와 시민단체 참여, 특히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효과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부패 수준은 높을 것으로 나타나,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이론의 일반적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민총생산과 정치적 참여의 효과는 기존 범죄학 이론의 설명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학 연구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먼저 일탈과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학 이론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일탈과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유용한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역시 세계가치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족 통합” 정도를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이 변인이 자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살인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신동준, 2004).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범죄학 이론의 범주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범죄학은 거리의 범죄에 대한 설명에 주로 몰두해 왔다. 하지만 서덜랜드가 화이트칼라 범죄 개념을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범죄학이 연구해야 할 일탈과 범죄의 범주는 그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범죄학 이론의 틀에 묶여있다면 범죄학의 설명력은 크게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이 연구의 결과는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부패와 같은 일탈행위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학적 시각을 넘어서 경제적·정치적 요인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과 기존의 범죄학적 요인과의 이론적 관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분석단위와 자료의 특성상 사례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부득이하게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분석결과는 다소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사례수가 적은 경우,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가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히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축적되기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문화적 차원의 변인들을 조작화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장점인 반면에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해당 항목들이 과연 이론적 개념에 대한 타당한 지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주의’ 변인은 사실 상 ‘전통적’ 가족에 대한 문화적 신념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제이론의 일반적인 가족 통합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이론적 개념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였고,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럼에도 변인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러한 문화적 변인들의 효과가 이론적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지상주의와 가족주의의 효과는 사실 사회의 근대성 정도가 부패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일인당 GDP의 일관된 효과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해석이다. 소위 저발전 내지는 ‘근대성’과 부패와의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취하고 있는 시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근대성’의 어떠한 부분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견해가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이 범죄사회학적 시각을 취하는 이 연구의 기본 방향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제지상주의와 특히 가족주의가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큰 반면, 종교적 통합은 그 자체로 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만약 ‘근대성’과 부패와의 관계를 파악하려 한다면, 그 핵심은 가족주의에 있으며 경제지상주의에도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태은·안문석·최용환. 2008.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보』 42권 1호: 293-321.
- 김두식. 2004. “세계화시대의 부정부패의 사회학: 사회학의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한국사회학』 38집 1호: 1-24.
- 박선웅. 1998. “부패용인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문화적 접근.” 『사회발전연구』 4집: 89-108.
- 박철현. 1999.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동준. 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이론 검증을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집 4호: 33-71.
- _____. 2008. “일탈사회학과 뒤르케임의 유산.” 『사회이론』 34호: 259-288.
- _____. 2006. “경제제도의 지배와 범죄.” 『사회이론』 30호: 29-63.
- _____. 2011. “제도적 아노미이론의 통합 이론적 성격과 불평등구조의 이론적 위치.” 『사회이론』 40호: 181-211.
- 양동훈. 2002. “정치부패의 문제와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체제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36집 2호: 93-112.
- 연성진. 1999.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와 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상철. 2000. “정치적 부패와 국제적 연계.” 『한국사회학』 34집 2호: 269-296.
- 이상환. 2002.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수(CPI)에 대한 경험적 고찰.” 『국제정치연구』 5집 2호: 57-78.
- _____. 2004.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집 1호: 139-162.
- 이영균. 2004.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권 3호: 192-223.
- 장근호. 2000.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경제·사회적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15집 1호: 31-56.
- 장수찬. 2008. “신생 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엘리트 계급의 부패와 사회적 신뢰 구축의

- 실패.”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7-56.
- 전수일. 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전영평. 2003.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 논리, 유형, 분석.” 『한국행정학보』 37권 3호: 95-116.
- 조은경 · 이정주. 2006.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0권 4호: 491-509.
- 황진영 · 강동관. 2007.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비교경제연구』 14권 1호: 1-38.
- Alam, M. Shahid. 1989. “Anatomy of Corruption: An Approach to the Political Economy of Under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8(4): 441-456.
- Alemann, Ulrich Von. 2004. “The Unknown Depths of Political Theory: The Case for a Multidimensional Concept of Corruption.” *Crime, Law & Social Change* 42: 25-34.
- Banfield, Edward. 1958. *The Moral Basis of Backward Society*. Chicago: Free Press.
- Bardhan, Pranab. 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3): 1320-1346.
- Benson, Michael L. and Sally S. Simpson. 2009. *White-Collar Crime: An Opportunity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 Bursik, Robert J., Jr. and Harold G. Grasmick. 1992. *Neighborhood and Crime: The Dimension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ollier, Michael W. 2002. “Explaining Corruption: An Institutional Choice Approach.” *Crime, Law & Social Change* 38: 1-32.
- Deflem, Mathieu. 1995. “Corruption, Law, and Justice: A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3): 249-258.
- della Porta, Donatella. 2004. “Political Parties and Corruption: Ten Hypotheses on

- Five Vicious Circles.” *Crime, Law & Social Change* 42: 35-60.
- della Porta, Donatella and Alberto Vannucci. 1999. *Corrupt Exchanges: Actors, Resources, and Mechanisms of Political Corruption*. New York: Aldine de Gruyter.
- Dobel, J. Patrick. 1978. “The Corruption of a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958-73.
- Durkheim, Emile. 193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 by George Simpson.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51. *Suicide*, trans. by John A Spaulding and George Simpson. New York: Free Press.
- Friedrich, Carl J. 1972. *The Pathology of Politics: Violence, Betrayal, Corruption, Secrecy and Propaganda*. New York: Harper & Row.
- Heidenheimer, Arnold J. 1970. “Perspectives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Political Corruption: A Handbook*, ed. by Arnold J. Heidenheimer, Michael Johnston, and Victor T. LeVin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Forty-Three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and Wayne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19-33.

- Johnston, Michael. 1986.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A Reassessment." *Comparative Politics* 18(4): 459-477.
- _____. 1998. "What Can Be Done about Entrenched Corruption?" pp. 69-90 in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7*, ed. by Boris Pleskovic.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_____. 2002. "Measuring the New Corruption Rankings: Implications for Analysis and Reform." pp. 865-884 in *Political Corruption: Concept and Contexts*, ed. by Anold J. Heidenheimer and Michael Johnst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Jung, Kun-Oh and Jin-Young Hwang. 2003. "The Determinants of Corruption: A Macroeconomic Aspect." 『경제연구』 21권 3호: 1-29.
- Keefer, Philip and Stephen Knack.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 and Politics* 7: 291-303.
- Klitgaard, Robert.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rnhauser, Ruth.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mbsdorff, Johann Graf. 2008. *The Methodology of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8*.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University of Passau. http://archive.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8
- Lancaster, Thomas D. and Gabriella R. Montinola. 2001.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Issues of Operationalization and Measurement."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6(3): 3-28.
- Leff, Nathaniel H. 1964.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8(3): 8-14.
- Leys, Colin. 1965. "What Is the Problem about Corruption?"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2): 215-230.

- Lipset, Seymour M. and Gabriel S. Lenz. 2000. "Corruption, Culture, and Markets" pp. 112-124 i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ed. by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 New York: Basic Books.
-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681-712.
- Merton, Robert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672-82.
- _____. 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essner, Steven F. and Richard Rosenfeld. 1997. *Crime and The American Dream*. Belmont: Wadworth Publishing Company.
- Montinola, Gabriella R. and Robert W. Jackman. 2002. "Sources of Corruption: A Cross-Country Stud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147-170.
- Moroff, Holger, 2004. "A Polychromatic Turn in Corruption Research?" *Crime, Law & Social Change* 42: 83-97.
- Nas, Tevfik F., Albert C. Price, and Charles T. Weber. 1986. "A Policy Oriented Theory of Corrup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 107-119.
- Nye, J. S. 1967.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2): 417-27.
- Passas, Nikos, 1995. "Continuities in The Anomie Tradition." pp. 91-112 in *The Legacy of Anomie Theory*, ed. by Freda Adler and William S. Laufer.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_____. 1997. "Anomie, Reference Groups, and Relative Deprivation." pp. 62-94 in *The Future of Anomie Theory*, ed. by Nikos Passas and Robert Agnew.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Philp, Mark. 2001. "Access, Accountability and Authority: Corruption and The Democratic Process." *Crime, Law & Social Change* 36: 357-377.
- Qizilbash, Mozaffar. 2001. "Corruption and Human Development: A Conceptual

- Discussion.” *Oxford Development Studies* 29(3): 265-278.
- Rose-Ackerman, Susan.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pson, Robert J. and W. Byron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 Sandholtz, Wayne and William Koetzle. 2000. “Accounting for Corruption: Economic Structure, Democracy, and Tra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 31-50.
- Scott, James C. 1969a. “Corruption, Machine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4): 1142-1158.
- _____. 1969b. “The Analysi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Nation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1(2): 315-341.
- Shaw, Clifford R. and Henry D. McKay.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reiber, James B., Amaury Nora, Frances K. Stage, Elizabeth A. Barlow, and Jamie King. 2006.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A Review.”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9(6): 323-337.
- Shleifer, Andrei and Vishny, Robert W.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599-617.
- Sung, Hung-En. 2002. “A Convergenc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olitical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Crime, Law & Social Change* 38: 137-160.
- _____. 2004. “Democracy and Political Corruption: A Cross-National Comparison.” *Crime, Law & Social Change* 41: 179-194.
- Sutherland, Edwin H. 1949. *White Collar Crim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 399-457.
- You Jong-Sung and Sanjeev Khagram. 2005. "A Comparative Study of Inequality and Corrup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1): 136-157.
- Vaughan, Diane. 1997. "Anomie Theory and Organizations: Culture and the Normalization of Deviance at NASA." pp. 95-123 in *The Future of Anomie Theory*, ed. by Nikos Passas and Robert Agnew.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Williams, Robert. 1999. "New Concepts for Old?" *Third World Quarterly* 20(3): 503-513.

Social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with Criminological Perspectives

Shin, Dong-Joon*

This paper investigates social causes of corrup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anomie theory and social control theory. The data come from World Values Surveys, World Bank, and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he results show that economy-centered cul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corruption level in general. No consistent effect of income inequality is found. However, the effect of economy-centered culture on corruption is greater among the countries of medium level income inequality than among those of low level income inequality. Interestingly, the effect of economy-centered culture disappears among the countries of high income inequality. Familism shows a consistent and strong positive effect on corruption, whereas religious integration fails to show any effect. Social trust seems to deter corrup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to voluntary association has a similar effect, but the effect disappears when familism or political participation is controlled. The results show that GDP per capita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strong and consistent factors. It might be necessary to go beyond the scope of traditional criminological perspectives and pay more attention to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when we study such types of deviance as corruption.

❖ Key words : Corruption, Criminology, Anomie, Social Control, Culture, Social Structure

투고일: 12월 1일 / 심사(수정)일: 12월 20일 / 게재확정일: 12월 20일

* Department of Sociology, Kookmin University

